

자치분권시대, 문화예술 협치를 위한 현장 콜로키움 “현장에서 묻고 답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 개요

- 추진목적 : 정부 자치분권 추진계획에 따른 ‘문화분권’ 관련 권역별 지역 현안 공유 및 중앙과 지역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 논의
- 행사명 : 문화예술 협치를 위한 현장 콜로키움 “현장에서 묻고 답하다”
- 일시 : 2019. 9. 6(금) 14:00~17:00
- 장소 : 서울 인사동 센터마크호텔
-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 참석자
 - 사회 : 김기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 경과보고(1인) : 황진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확산본부장(한지협 사무국장)
 - 기초발제(1인) : 임학순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문화정책연구소장
 - 보조발제(2인) : 임미혜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본부장, 서정문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 토론(3인) : 김기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노영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배윤수 부천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 예술위 지역협력 소위원회 위원, 문화예술분야 유관기관 대표 및 전문가,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 지역문화과) 관계자, 예술인, 한지협 등

※ 행사장 정보



- * 행사장 : 서울 센터마크호텔
-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38
- * 오시는 길
 - 종각역 2번, 3-1번 출구 도보 5분
 - 광화문역 2번, 3번 출구 도보 10분

□ 행사일정

구 분	시 간	내 용
-	13:00~14:00	· 참가자 등록
1부	14:00~14:10('10)	· 환영사 : 박종관 위원장(한지협 의장) · 사회 및 참가자 소개 : 김기봉 예술위 위원
	14:10~15:10('60)	· 경과보고 : 황진수('10) 본부장 · 기초발제 : 임학순('20) 소장 · 보조발제 : 임미혜('15) 본부장, 서정문('15) 본부장
2부	15:20~16:20('60)	· 패널토론 : 김기봉 위원, 노영순 위원, 배윤수 본부장
3부	16:30~17:00('30)	· 공개토론 및 질의응답

□ 행사내용

1. 경과보고

- 한지협 임시총회, 라운드테이블 주요 논의 결과 공유 : 황진수 예술위 본부장
- (1차)호남·제주권, (2차)경상권, (3차)충청·강원권 예술현장 의견수렴
라운드테이블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보고

2. 기초발제 : 임학순 소장

- 주제 : 자치분권시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의 예술협치
방향과 과제

3. 보조발제 : 임미혜 본부장, 서정문 본부장

- 주제 : 예술위-광역-기초재단 예술지원 지역별 세부 협치 방안 제안

4. 토론패널 : 김기봉 위원, 노영순 위원, 배윤수 본부장

5. 공개토론 : 참석자 대상 공개토론 및 질의응답 등

문화예술 협치를 위한 지역 현장 라운드테이블 의견 수렴 결과 및 주요 쟁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확산본부장 황진수

1) 배경 및 경과

□ 논의 배경

- ‘중앙집권에서 자치분권의 문화로’ 문화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지역 기초문화예술지원사업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한 강한 현장의 요구
 - 정부 자치분권 기본계획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 자율성 강화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등 국가 균특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기초예술창작활동 위축 가능성 등 지역 문화예술정책 현안 공유 및 쟁점 확인 필요
- 예술위원회-광역시-기초 간 새로운 지역문화예술지원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협치 방안 논의 필요성 증대
 - ‘문화분권’ 관련 중앙과 지역 간, 지역과 지역 간 새로운 문화예술 협력 거버넌스 제도 구상 필요
 - 예술위원회, 광역시·도(문화재단) 및 기초지자체(문화재단) 협력·협치의 상생발전방향 모색 필요

□ 문화예술 균특사업 지방이양 관련 의견수렴 및 라운드테이블 개최 경과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균특) 지방이양 관련 의견수렴

사업명	주요내용
지역협력네트워크워크숍 (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지원 제외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창작지원 예산 감축 우려 ⇒ 자치분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편성 시,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 축소 가능성이 높음
한지협 임시총회(6.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문화예술지원 분야에 대한 중앙의 대안정책 마련 필요 ⇒ 지역 여건에 따라 지역별 격차가 증대될 수 있으므로 기초예술을 지방사무로만 볼 것이 아닌 국가 예술진흥 정책 차원으로 검토 필요
제2차 지역협력 소위원회(6.21)	
지역문화 정책포럼(6.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으로서의 문체부와 예술위원회 역할 요구 ⇒ ‘국가문화예술진흥’의 측면에서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역할 수행 필요

- 권역별 라운드테이블 개최

- 대상 : 예술위원회 지역협력 소위원회, 시·도 및 광역, 기초 문화재단 담당자, 예술단체, 한지협 등

사업명	주요내용
호남·제주권 (8.13/전남문화관광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광역시, 지역↔ 기초 지역 간 관계, 역할 재설정 필요 • 지역 기초예술 창작분야의 예산확보 근거나 명분 제시 등 노력 필요 • 지역 간 문화예술창작기반 불균형 및 기초예술 생태계 조사연구 필요 • 예술위원회의 중앙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사업영역 협치 필요
경상권 (8.21/부산문화관광재단)	
충청·강원권 (8.27/충북문화재단)	
수도권 (9. 6/센터마크호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대상 : 문체부, 예술위, 서울, 인천, 경기 예술사업본부장, 한지협, 한광연, 전지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참여

○ 지역협력사업 실무자 간담회

사업명	주요내용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실무자 간담회 (8.29~30/서울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예진흥기금 공연장상주사업에 대한 지역협력, 지역 자율성 강화 필요 • 문예진흥기금 공연장상주사업, 아르코-지역 간 상호 협약방식 제안

※ 논의 참석자 명단(별첨)

2) 권역별 라운드 테이블 주요 논의 내용

호남 · 제주권 라운드테이블(8.13) 핵심 논의 내용

□ 중앙↔광역 지역↔기초 지역 간 관계, 역할 설정 관련

- 각 주체 간 역할과 상호 관계에 대한 조사 연구 및 협치 제도 개선 필요
- 협치 대상, 범위, 방식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방안 마련 필요
- 각 주체 모두를 연계할 수 있는 신규 협력 사업 모델 개발 필요
- 예술위원회(한지협) 중심으로 중앙과 지역 간 정책 및 사업 논의 협의체 조직 기능 강화 필요(광역에서 기초까지 참여 범위 확대)

□ 기초예술 창작분야의 예산 관련(법적 근거, 지원 명분과 연계)

- 지방이양 후 지역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에 크게 의존
- 국비 매칭처럼 강제되지 않으면 예술창작지원 재원확보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지자체 예술창작지원 근거, 명분 필요
- 지방이양 과정에서 지자체의 문화예술 예산 일정 비율 미확보에 따른 패널티 부과 방식도 검토 필요

□ 문화예술 관련 법령 및 법적 근거 마련 등 법체계 관련

- 문화예술진흥법,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등 분산된 문화예술 관련 법령에 대한 통합 정비 필요
- 문화예술진흥법은 73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으나 ‘예술개념’에 대한 정의부터 위원회의 새로운 역할까지 현행화 필요
- 지역문화진흥법에는 기초예술지원에 대한 지자체나 국가적인 책무 부분이 제외되어 있음. 지역(지자체)이 기초예술을 육성해야 한다는 명시가 분명하지 않으면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예술위가 역할을 함께 해야 함

□ 예술위의 역할과 사업 영역 부분

- 문예진흥기금 재원의 안정적 마련 장치 필요
- 기초예술 창작지원 부분은 예술위원회와 지역이 중복되는 부분이며, 예술위원회는 공모사업이나 심의보다도 중앙예술정책기관으로서 예술정책 연구, 정책 협의 및 정책 개발 등에 집중 필요
- 중앙-지역 간 관계 조정 및 상호 소통을 위한 예술위 협력관 제도 재도입 필요
- 지역 예술가, 예술창작환경 등에 대한 기초 데이터베이스 확보 필요
- 지역과 지역 간 교류 기능 강화, 중앙에 집중된 예술전문인력에 대한 지역 전문인력 지원 및 상호 교류 강화 필요
- 문화예술 관련 지원체계가 파편화되어 예술지원행정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예술지원센터 필요

경상권 라운드테이블(8.21) 핵심 논의 내용

□ 자치분권에 따른 지방이양과 예산 관련 사항

-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자치분권에 대한 한계와 우려
 - 인구와 재정 상황 고려, 문화예술 분야의 빈익빈부익부 현상 심화
 - 서울 지역에 집중된 인프라 및 지원에 따른 지역 소외 현상의 심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 차원에서 지역 안배가 필요함
 - 순수예술지원의 정당성과 공감대 확보를 위한 지역 예술인의 노력 필요 ⇒ 중앙 차원에서는 예술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환경 조성 필요
- 지방이양에 따른 2020년 예산 편성 관련 어려움 및 내년도 사업의 발생 문제점
 - 지방이양 대상 사업은 지방비 통해 3년 간 전액 보전 받는 것이 현 정부방침이나 당장 내년도 예산 편성 관련 지침, 안내가 부족하여 현장 혼란 가중 ⇒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고려한 빠른 대안과 방안 마련 필요
 - 서울문화재단 공모 연기 사례처럼 2020년도 예산 편성 관련 혼란으로 내년도 사업 추진 시 지연 등 문제 발생 가능, 예술현장의 동요 걱정

□ 중앙↔광역↔기초 지역 간 협력체계 및 새로운 협치 방식의 제안

- 새로운 협력체계 및 관계 구축의 필요성
 - 현실적으로 기초 단위에서 자율적 사업 추진의 어려움 존재, 중앙의 공모사업 지원시에도 예술단체와 경쟁하는 상황 발생
 - 중앙↔광역↔지역 간 낙수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기초문화재단 대상의 행정체계 마련이 필요함 ⇒ 단순 낙수효과에서 기초 지역도 자율적 예산확보 고민 필요
- 중앙-지역 간 '협약' 등 구체적인 협력·협치 방식에 대한 제안
 - 하향식 사업추진에 따른 현장과의 괴리, 사업의 중복성, 지역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 현 문제점을 고려했을 때, 기존 중앙 중심의 공모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이 계획하여 국고나 기금과 매칭하는 '협약' 방식에 대한 고민 필요(프랑스 사례)
 - 지역에서 필요하지만 예산 문제로 하기 어려운 사업을 중앙과의 매칭을 통하여 예산을 +@하여 확대하는 등 구체적인 방식의 새로운 협력 모델 필요

□ 예술위의 역할과 사업 관련 사항

- 통합문화이용권 반납액 관련 개선 요구
 - 부산문화재단 280억 예산 중 통합문화이용권이 100억 정도가 되나, 반납액이 많아 관리차원에서 메리트가 없어 민간으로 넘기는 것을 요구하고 있음. 창작예산으로 전환 등 반납액 활용에 대한 자율성이나 방법에 대한 강구 필요
- 기초예술과 생활예술 관련 사항
 - 생활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생활예술 분야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연계 방안 검토

충청·강원권 라운드테이블(8.27) 핵심 논의 내용

□ 자치분권에 따른 지방이양과 예산 관련 사항

- (지역 빈익빈부익부 문제) 인구, 지방재정 등 지역 여건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문화예술 분야의 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음
- (지방이양 대상 사업의 '20년도 예산 편성 문제) 지방이양 대상사업의 국비 매칭 제외에 따른 지역자치단체 예산 편성의 어려움 존재
- (지방이양에 따른 기초예술 창작지원 예산 감소 우려) 공모사업 신청자 증가 대비 예산의 현상 유지 혹은 감소 추세, 생활문화 관련 예산 증가 상황에서 포괄적 지방이양에 따른 예술창작 분야 규모 축소 우려
-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의 제도 설계 필요) 국비 매칭의 유무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 예산 규모가 상이함, 문화예술 분야만 사용하도록 꼬리표 필요
- (소액다건 중심의 지역 예술창작 지원방식) 창작지원 관련 예산이 적은 지역은 대부분 소액다건 위주의 예산 분배형태로 진행되어 집중 육성이 어려움 ⇒ 지원방식에 대한 중앙과 지역 간 역할에 대한 고민 필요
- (행정체계에 대한 지역 자체 제도 정비 및 개선 노력) 문화행정, 문화정책에 대한 지자체 자체 학습 정도에 대한 확인 필요, 세출예산만 집중할 것이 아닌 3년간 유예기간 이후 광역과 기초에 구분없이 지역 자체적으로 정책과 사업을 수행할 역량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필요
 - 국비매칭 비율이 높아질수록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이양을 기회삼아 지역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만들어가는 노력 추진

□ 중앙↔광역↔기초 지역 간 협력체계 및 새로운 협치 방식의 제안

- (중앙-광역-기초 간 역할 및 기능 조정의 필요성) 중앙↔광역↔기초 지역 간 기능과 사업의 유사·중복성으로 인해 효과성이 낮고 현장 혼란이 가중됨, 문화예술 전달체계의 효과 증진을 위해 전달체계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
 - 기초예술 분야의 지역 간 격차는 더 커질 것이므로 국가, 광역, 기초 단위로 구분하여 예술인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 마련 필요
- (협의를 위한 새로운 전달체계 재구축) 기초문화재단의 역사가 짧지만 전달체계의 구조에서 소외되어 지역맞춤형 정책 설계에 한계점이 존재함
 - 중앙과 광역 중심의 관계에서 벗어나 기초가 포함된 공동협력 형태의 새로운 구조, 행정체계 마련 필요
- (광역과 기초 간 관계 변화) 기초문화재단이 다수 설립되고 있는 강원도의 경우, 기초 단위는 생활문화와 지역향유의 관점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에 집중하고, 광역은 창작 향유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점진적 관계 설정 추진 중
 - 다만 기초 지역의 창작지원 관련 사업 수행 역량이나 환경이 달라 고민은 필요함

□ 중앙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위원회의 방향 재설정

- (기초예술 인식 제고 및 아젠다 발굴을 위한 지원) 기초·순수예술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계량적 통계자료 확보의 어려움, 예술 가치 확산을 위한 연구, 통계 등 기초 자료 제공 필요
 - 산발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 타당성 연구를 모으고, 전 지역을 아우르는 중앙 차원의 연구와 결과가 필요함, 지역의 자료를 통합하고 지역 주요 성과를 백서 등으로 발간하여 성과공유대회 등을 통해 확산될 수 있도록 중앙으로서 기능 수행
-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앙의 역할 고민, 협치 방식의 검토) 지방이양에 따라 기초예술 창작분야의 지역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파트너십 형태의 사업을 통해 위원회가 적극 나서야 함 [예-과거 시도기획지원사업의 형태]
 -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의 실패(보조금의 병폐) 분위기 속에서 지역의 한계도 분명함, 현재 남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까지 지방이양 될 경우 예술위와 지역 간 연결고리가 없으며 지역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수 있음
 -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위원회 입장에서 지역 협력의 우수사업 모델이라 생각하며 협약 방식 등을 통해 새로운 협치모델로 만들어어나가고자 함
 - 전국 대상의 직접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위원회가 광역, 기초와 어떤 형식으로 함께할 것인지 방향을 먼저 설정해야 함
- (비법정단체, 비영리기관 지원 관련) 지방재정법에 따라 비법정단체나 비영리기관의 지원이 어려운데 관련 법인 문화예술진흥법 등에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구체적인 지원 방법 등에 대한 안내 필요

□ 위원회 사업 관련 요구 사항

- (공모사업의 지역 분배 고려 사항) 예술위 공모사업의 경우, 현 법령 및 체제 내에서 서울에 집중될 수밖에 없으므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권역 단위로 분배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노력 중
 - 다만, 재단을 통한 공모사업의 규모가 적는데 규모를 고려했을 때 그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 필요
- (국제교류사업 관련 협치 방식 제안) 해외 인적네트워크나 인프라 한계로 지역의 훌륭한 자체 레지던시 공간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위원회 국제교류사업과 연결하여 지역 공간과 예술가의 네트워킹 장을 마련하는 협력 방식 제안
- (통합문화이용권 반납액의 활용 여부 검토) 강원, 전남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통합문화이용권의 반납액이 많은데 이를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검토 필요
-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사업의 현장 의견 및 공간지원에 대한 요구) 장기적인 관점으로 단체를 지원하는 해당 사업에 대한 현장 예술인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많음, 추후에는 예산이 부족한 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간 지원, 공간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필요

3) 토론 쟁점 제안

- 자치분권의 시대,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 활성화, 기초예술창작여건 강화를 위한 예술행정지원 기관의 역할 성찰 및 방안 모색
 - 예술행정지원 기관별 기능의 다양성 및 사업 우선순위 확인 필요
 - 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진흥원, 예술인복지재단,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 등
 - 예술의 사회적 가치 옹호 및 확산을 위한 중앙과 지역의 공동 활동
 - 지역별 예술창작 생태계 및 창작 지원 사업 내용
 - 예술대학, 신진 예술가 전문 인력 양성 기반
 - 청년 예술가/예술단체 창작 여건 및 활동 기반
 - 지역 거주 예술인 창작 여건 및 창작 생태계
 - 중앙 및 지역 간 기초예술 창작지원 구조, 재정 규모와 내용
 - 기관 별 예술창작 지원 사업 실행 조직 및 인력 현황

- 단기간, 중장기 예술위원회와 광역 및 기초문화재단, 광역과 기초문화재단, 각각의 지역, 기관 및 문화재단 상호 간 협력 로드맵 필요
 - 협치의 대상과 범위 제안¹⁾

협치 영역	협치 대상	중앙 관계 기관	지역 관계 기관
기초예술 창작향수 가치옹호	전문예술창작지원(직접, 간접사업) 창작육성토대(광역, 기초) →민간대표단체 집중 양성(공동 협치)→ 국가차원 국제교류(예술위원회)	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 (광역 및 기초 단위)
	예술향수지원(문화바우처, 통합문화이용권)		지역문화재단
생활문화	생활문화지원, 지역고유문화, 주민참여 저변확대	지역문화진흥원	문화재단, 문화원, 생활문화지원센터
예술교육	예술교육활동지원	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재단
예술경영	예술경영조직컨설팅지원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역문화재단
예술인복지	예술인복지지원	예술인복지재단	지역문화재단

1) 2019 대전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예술인 대토론회(2019.7.23, 대전문화재단)-문옥배 발제문 중 일부 인용

[붙임1] 논의 참여자 현황

1. 한지협 임시총회(6.19) 참석자 명단

구분	기관명	부서(팀)	직책	참석자명	비고
1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팀장	정미정	
2	대구광역시	예술진흥팀	주무관	이강훈	
3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팀장	한명숙	
4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팀장	김낙철	
5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주무관	신자림	
6	경기도	문화정책과	팀장	김태수	
7	경기도	문화정책과	주무관	조현민	
8	강원도	문화예술과	팀장	박재호	
9	충청북도	문화예술산업과	주무관	이금열	
10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주무관	조혜현	
11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주무관	김민경	
12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팀장	오수미	
13	경상북도	문화예술과	주무관	심봉섭	
1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팀장	김미영	
15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본부	본부장	임미혜	
16	부산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	팀장	조형수	
17	대구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	본부장	고준환	
18	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	본부장	정재우	
19	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팀	팀장	변순영	
20	광주문화재단	문화사업실	실장	김지원	
21	대전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	본부장	이희진	
22	울산문화재단	사무처	사무처장	박주향	
23	세종시문화재단	사무처	사무처장	김혜옥	
24	세종시문화재단	예술지원팀	팀장	유정규	
25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	본부장	서정문	
26	경기문화재단	문화정책실	실장	원준호	
27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팀	책임	김진희	
28	경기문화재단	문화정책실	선임	박슬기	
29	강원문화재단	문예진흥실	실장	김현숙	
30	강원문화재단	문예사업팀	팀장	서하나	
31	충북문화재단	사무처	사무처장	고찬식	
32	충북문화재단	문화예술팀	대리	황금비	
33	충북문화재단	문화예술팀	주임	왕용운	
34	충남문화재단	문예진흥부	부장	변상섭	
35	전북문화관광재단	문예진흥팀	팀장	박찬영	
36	전남문화관광재단	사무처	사무처장	최소영	
37	전남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	팀장	김광훈	
38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문화사업부	부장	김병태	
39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사업본부	본부장	고희송	
40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창작팀	팀장	김화자	
41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창작팀	차장	김세진	
42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과장	송윤석	
43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주무관	김정임	
4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위원장	박종관	
4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확산본부	본부장	박두현	
4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협력부	부장	황진수	
4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협력부	차장	이민하	

구분	기관명	부서(팀)	직책	참석자명	비고
4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협력부	담당	조준형	
-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	*의장	박종관	예술위위원장
-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사무국	*사무국장	황진수	
49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사무국	간사	심수진	
50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사무국	사무국장	배윤수	

2. 호남제주권 라운드테이블(8.13) 참석자 현황

연번	구분	소속	성명	직책	비고
1	예술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협력소위원회	박종관	위원장	
2			김기봉	위원장	
3			김광훈	위원	
4			김지원	위원	
5			배윤수	위원	
6			정미숙	위원	
7			주미하	위원	
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확산본부	황진수	본부장	
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협력부	이민하	차장	
10			김영태	차장	
11			서정완	과장	
12			조준형	사원	
13	한지협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사무국	심수진	간사	
14	광주	광주광역시 문화도시정책과	이동호	주무관	
15	광주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팀	강현미	팀장	
16	광주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팀	이지선	차장	
17	광주	(사)전통문화연구회 일쫓	김양균	대표	
18	전남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정명섭	과장	
19	전남	전남문화관광재단	조용익	대표이사	
20	전남	전남문화관광재단	최소영	사무처장	
21	전남	전남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	정선재	차장	
22	전남	담양군문화재단	정병연	본부장	
23	전남	전남예총	장유호	사무처장	
24	전북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배진길	주무관	
25	전북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문예진흥팀	박찬영	팀장	
26	전북	전주문화재단	장걸	사무국장	
27	전북	(사)한국예총 전북연합회	백봉기	사무처장	
28	제주	제주문화예술재단	고희송	본부장	
29	제주	제주문화예술재단	김화자	팀장	
30	제주	제주문화예술재단	김세진	차장	
31	부산	부산문화재단	정연승	담당	
32	부산	부산문화재단	성유정	담당	
33	충북	충북문화재단	이정민	과장	
34	충북	충북문화재단	김은주	차장	

3. 경상권 라운드테이블참석자(8.21) 현황

연번	구분	소속	성명	직책	비고
1	예술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협력소위원회	이승정	위원장	
2			김기봉	위원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확산본부	황진수	본부장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협력부	이민하	차장	
5			조준형	주임	
6	한지협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사무국	심수진	간사	
7	경남	경남도청 문화예술과	서정선	주무관	
8			이경태	팀장	
9			김종민	차장	
10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진흥팀	유지용	과장	
11	부산	부산광역시청 문화예술과	김귀옥	사무관	
12			전연희	주무관	
13		부산문화재단	강동수	대표	
14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본부	김두진	본부장	
15		부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양주원	팀장	
16			권영훈	팀원	
17			정연승	팀원	
18			성유정	팀원	
19		금정문화재단	설영성	사무처장	
20		부산진문화재단 TF팀	김명희	팀장	
21	부산예술인총연합회	하주희	사무처장		
22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회	김호진	사무처장		
23	울산	울산광역시청 문화예술과	윤영철	주무관	
24		울산문화재단	박주향	사무처장	
25		울산연극협회	이현철	前지회장	

4. 충청강원권 라운드테이블 참석자(8.27) 현황

연번	구분	소속	성명	직책	비고
1	예술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종관	위원장	
			이승정	위원장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협력소위원회	김기봉	위원	
			김광훈	위원	
			배윤수	위원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확산본부	황진수	본부장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협력부	이민하	차장		
5		조준형	주임		
6	한지협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사무국	심수진	간사	
7	대전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김낙철	팀장	
8			이희진	본부장	
9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이성은	팀장	
10	임수진		팀원		
11	세종	세종시청 문화예술과	이윤희	주무관	

연번	구분	소속	성명	직책	비고
12		세종시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송미영	주임	
13		한국예총 세종시연합회	방승복	담당	
14	충남	충남문화재단 문예진흥부	변상섭	부장	
15	충북	충북도청 문화예술산업과	김연준	과장	
16		충북도청 문화예술산업과	조병철	사무관	
17		충북도청 문화예술산업과	임정규	주무관	
18		충북문화재단	김승환	대표	
19		충북문화재단	고찬식	사무처장	
20		충북문화재단 문화예술팀	김은주	차장	
21			이정민	과장	
22			황금비	대리	
23			이서인	주임	
24		충북문화재단 행정지원팀	이금열	팀장	
25			최영갑	차장	
26		충북문화재단 생활문화팀	심경아	팀장	
27			김병만	차장	
28		충북문화재단 예술교육팀	김희식	팀장	
29			홍경택	과장	
30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지역문화팀	박정수	팀장	
31		충주문화재단 문화정책팀	이태균	차장	
32		제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팀	박주리	팀장	
33	충주중원문화재단	안진상	사무처장		
34	극단꼭두광대	김지영	기획실장		
35	강원	강원도청 문화예술과	최영숙	주무관	
36		강원문화재단 문예사업팀	서하나	팀장	
37		강원문화재단 문예사업팀	김훈정	대리	
38		춘천시문화재단 정책기획팀	신정호	팀장	
40		춘천시문화재단 예술지원팀	김태경	팀원	
41		춘천시문화재단 정책기획팀	신의섭	팀원	
42		(사)강원민예총	박종대	사무처장	

5.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실무자 간담회 참석자 현황

번호	8.29(목)			8.30(금)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1	서울특별시	주무관	김소연	부산문화재단	팀장	양주원
2	서울문화재단	주임	김한솔	부산문화재단	팀원	권영훈
3	부산광역시	주무관	박선옥	인천문화재단	과장	최기현
4	대구문화재단	팀원	이하나	광주광역시	주무관	이동호
5	대전문화재단	팀원	이동영	세종특별자치시	주무관	이윤희
6	울산문화재단	팀장	김잔디	세종시문화재단	팀장	유정규
7	강원도	주무관	정성환	세종시문화재단	대리	최윤정
8	충청북도	주무관	연소현	경기도	주무관	윤승노
9	충북문화재단	과장	김은주	경기문화재단	차장	조지연
10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대리	박하나	강원문화재단	대리	김훈정
11	경남문화재단	차장	김종민	충남문화재단	주임	조진선
12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주임	이태규
13				경상남도	주무관	서정선
14				제주특별자치도	주무관	강수희

자치분권시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의 예술협치 방향과 과제



임학순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문화정책연구소장
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
hsyim@catholic.ac.kr)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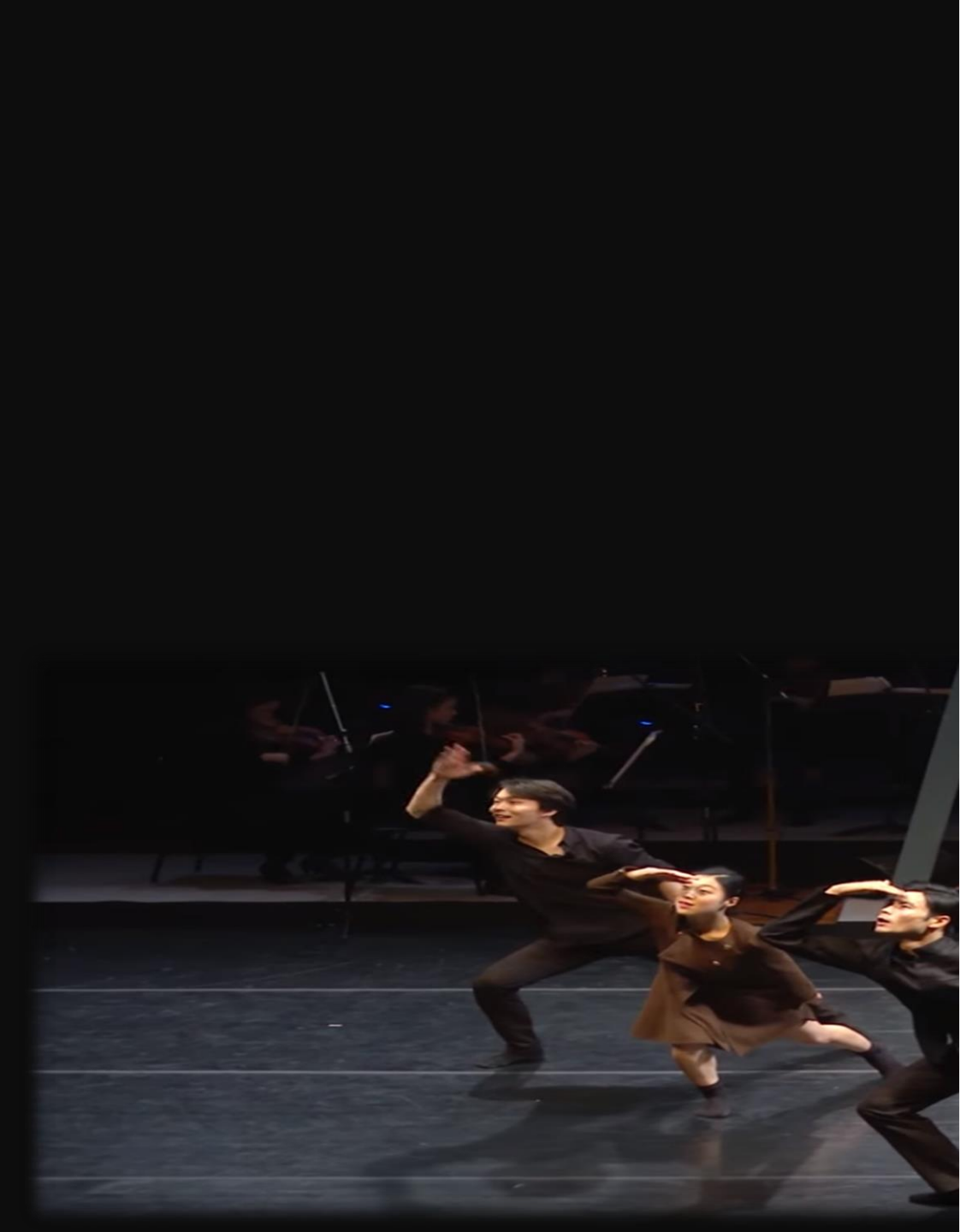
I . 발제의 초점

II . 문화예술 협치의 맥락과 이슈

III . 문화예술 협치 모델

IV . 문화예술 협치 과제

V . 맺으며



I 발제의 초점

1. 초점

- “문화 분권” , “문화 자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의 협치 모델(governance model)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과제 탐색.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주요 업무 영역인 **“문화예술 창작 분야”** 를 중심으로 논의.

I 발제의 초점

1. 초점

< 주요 내용 >

- 문화예술 협치의 맥락과 이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의 문화예술 협치 모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의 문화예술 협치 과제

I | 발제의 초점

2. 문화예술 협치(Arts Governanace)란

- **Governance 어원** : "To Steer or Give Direction"
- Governance의 **무정형성(amorphous)**

Governance 분석 단위 5개 (Wikipedia)

- 거버넌스 :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의사결정 과정
- 분석 단위 : Problems, Actors, Norms, Processes, Nodal Points

I | 발제의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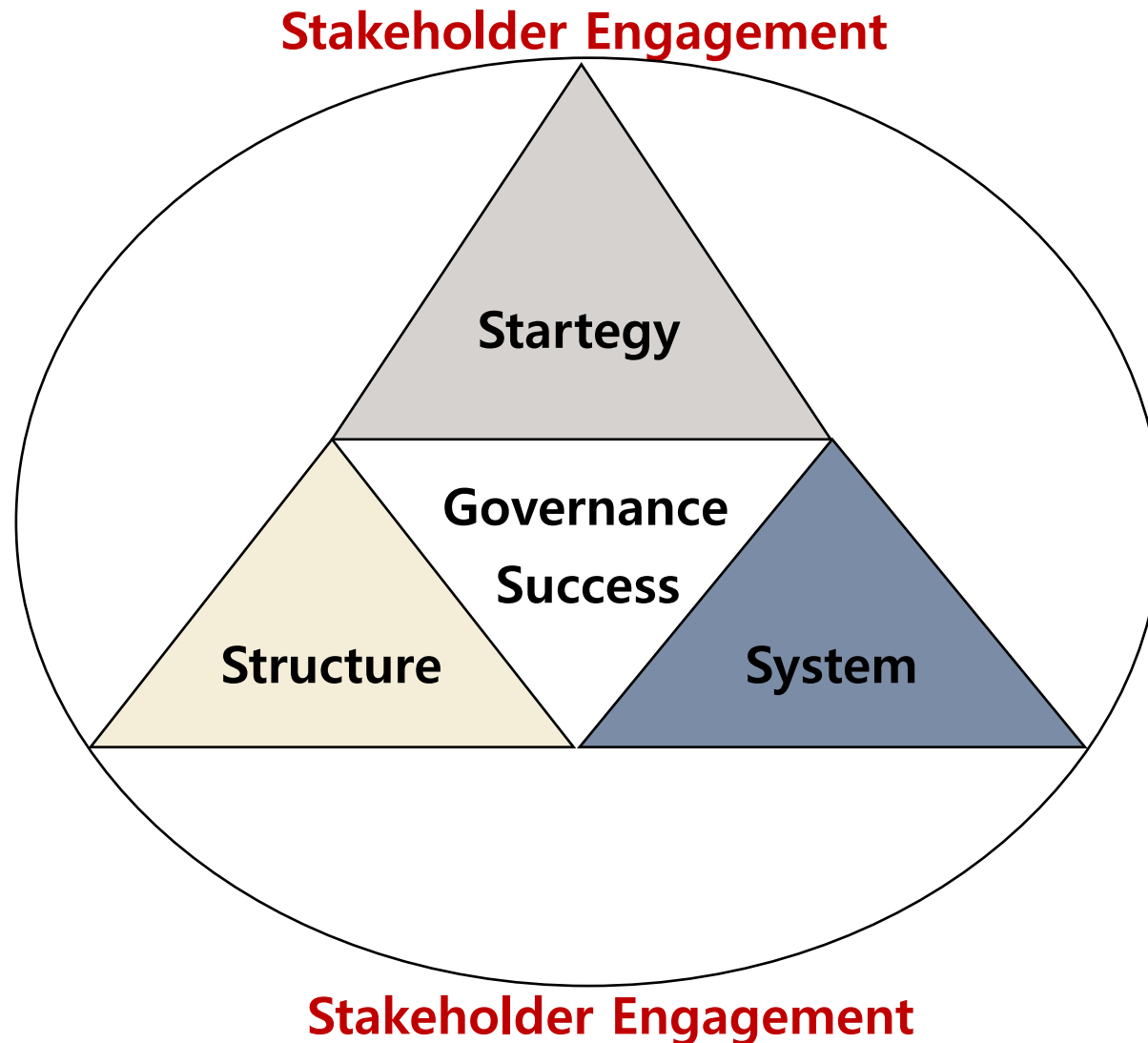
2. 문화예술 협치(Arts Governanace)란

Arts Governance (Rentschler Ruth, Arts Governance, 2015)

- 감성적 공간(emotional space)에서 전략적 리더십을 제공하는 과정
- 예술적 수요와 사업적 수요의 균형
- 전략적 접근 : 외부 환경과의 관계 형성
- 행태적 접근(human behaviour) + 제도적 접근 (system, institutions)

I 발제의 초점

Triangle of Arts Governance Success



II 문화예술 협치의 맥락과 이슈

1. 지역 문화 분권의 실현: 『문화비전 2030』, 『새예술정책(2018-2020)』

<맥락>

- 지역 문화 분권과 자치가 문화정책 핵심 가치로 부각
- 문화정책의 재정 분권, 권한 분권 흐름
- 문화정책 사업의 지방이양 흐름

II 문화예술 협치의 맥락과 이슈

1. 지역 문화 분권의 실현: 『문화비전 2030』, 『새예술정책(2018-2020)』

<이슈>

지역 간 불균형 우려(Equity)

-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 이슈

책임성 이슈 (Public Accountability)

- 지역 문화재정 확보 및 운영 체계의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확보

정책 전문성 확보 이슈 (Policy Capacity)

- 지역의 문화정책 전문 역량 강화

I 발제의 초점

1. 지역 문화 분권의 실현

지역 분권 관점에서 해외 사례 분석의 시사점
(양혜원, 2018, 지역분권 관점에서의 주요 국가 예술지원정책 분석 연구)

- 지역 분권 흐름 강화 및 기초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강조
- 지자체간 연합 및 협력체의 역할 강조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약을 통한 지역의 자율성 및 공공서비스의 책임성 확보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광역과 기초간의 역할 배분
- 지자체 예술 지원 예산의 감축과 중앙정부 재원에 대한 의존성 강화
- 예술지원기관 구성에 있어서 지역 대표성의 반영
- 중앙정부와 지역문화정책 협의체와의 수평적 파트너십

II 문화예술 협치의 맥락과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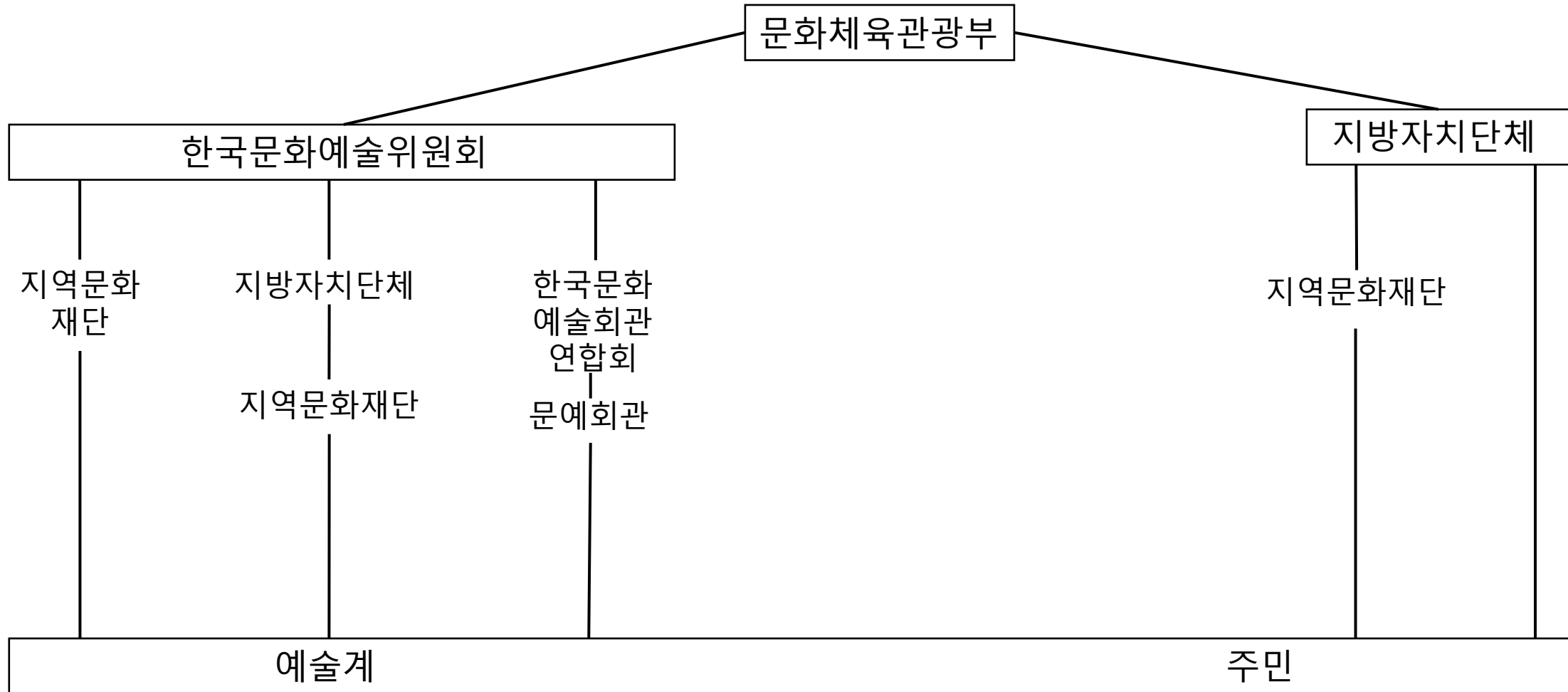
2. 현행 예술정책 지원 전달체계 실태

<맥락>

- 전달체계의 복잡성 (complexity)과 산만성(distraction)
- 개별 사업 중심의 전달체계
- 소액 다건 사업 구조

II 문화예술 협치의 맥락과 이슈

현행 예술정책 지원 전달체계 현황 (예술창작 분야)



II 문화예술 협치의 맥락과 이슈

2. 현행 예술정책 지원 전달체계 실태

<이슈>

- 개별 사업 기반의 전달체계를 통합사업 체계로 재구조화
- 지역 특성과 수요 기반의 자율형 정책 사업에 대한 지원체계 개발

II 문화예술 협치의 맥락과 이슈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문화예술 지원체계

<맥락>

① 예술 사이클의 『예술창작 지원』에 한정

- 문화예술교육, 예술경영, 예술인복지, 생활예술 등과의 통합적 연계성 미흡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주요 영역 : 문학, 공연예술, 시각예술, 예술자료관, 국제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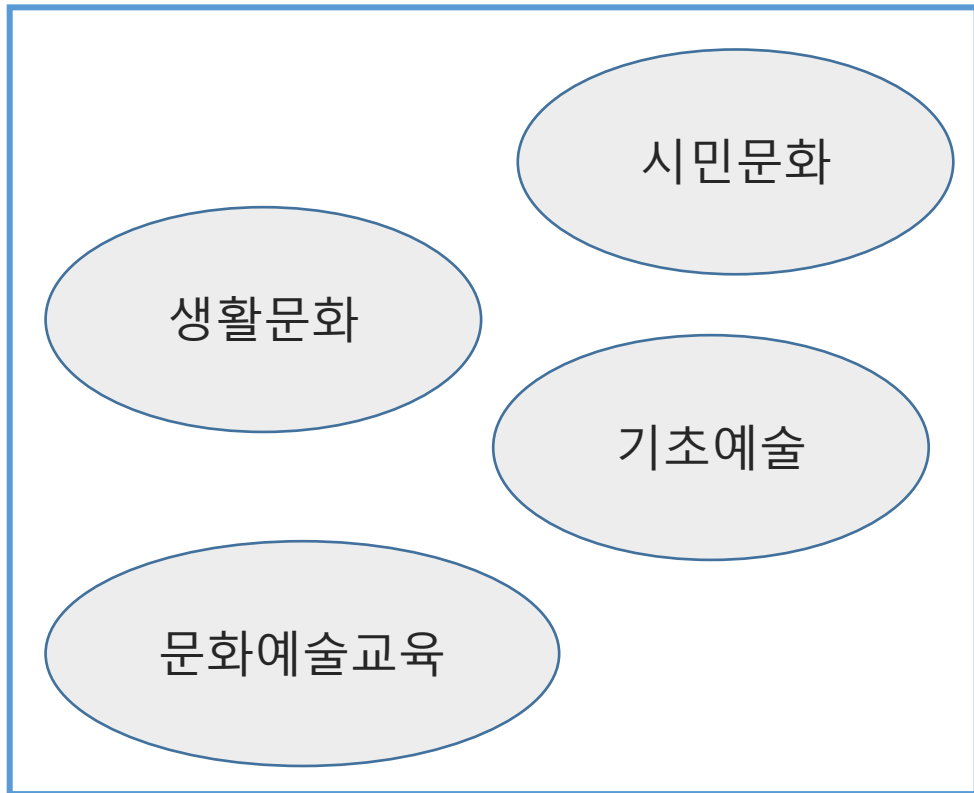
② 지역문화재단의 “문화”영역과의 연계성 미흡

※ 지역문화재단의 “문화”영역 : 예술, 생활문화, 시민문화, 전통문화, 문화적 지역재생 등 광의의 문화 포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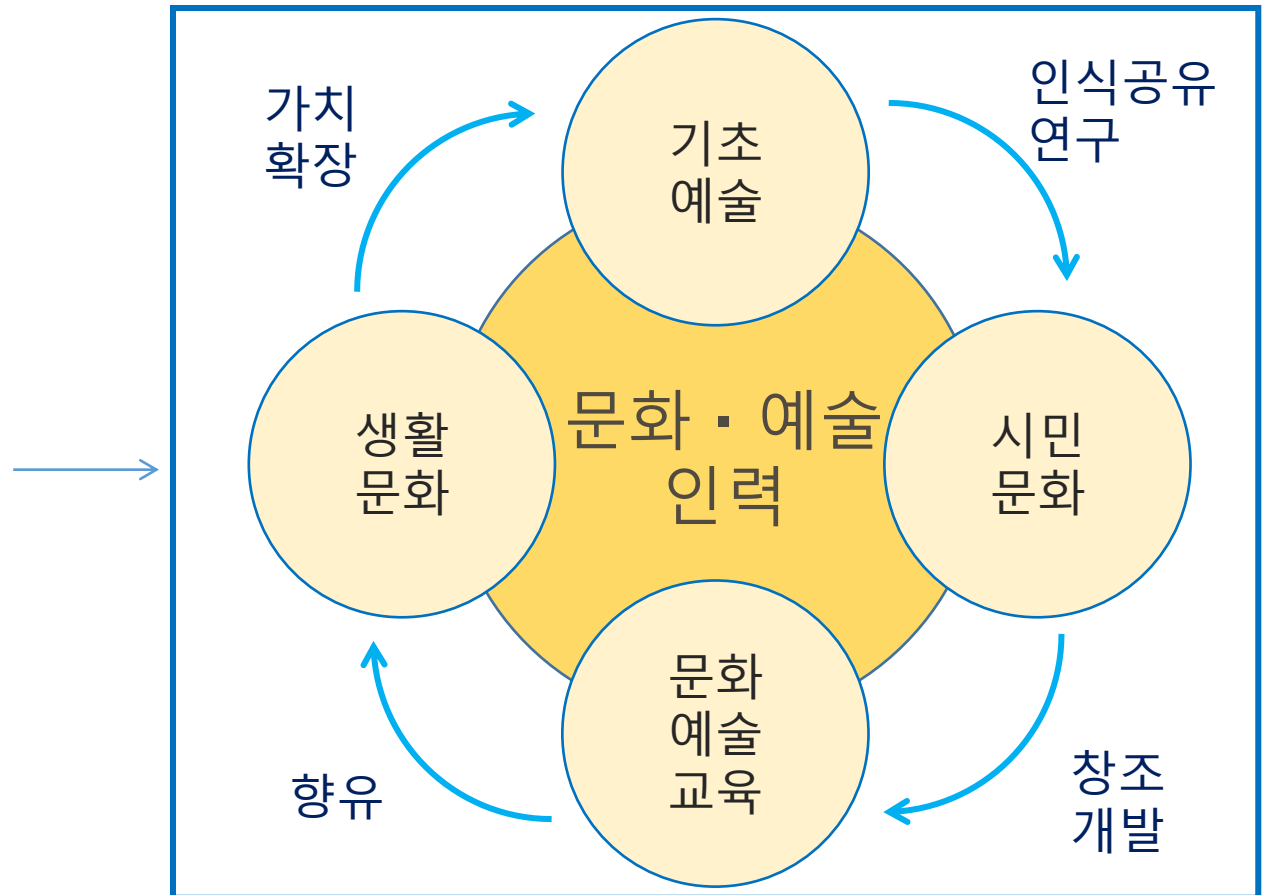
II 문화예술 협치의 맥락과 이슈

지역문화의 장

분절 · 경쟁의 장



융합 · 협력의 장



II 문화예술 협치의 맥락과 이슈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문화예술 지원체계

<맥락>

③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 문화예술 지원 사업 변화

- 1984년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 창설 지원 (84년-98년 약 139억원)
- 1999년 지역 문화예술사업 공모를 위해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시작 (35억원)
- 2009년 지역배분형 사업 개선, 지역협력형 사업 확대 실시 (183억원)
- 2017년 기금 고갈 등으로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사업이 국고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 (162억)
- 2020년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사업 지방이양, 지역의 포괄재정으로 운영될 예정

II 문화예술 협치의 맥락과 이슈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문화예술 지원체계

<이슈>

예술의 순환 사이클 및 가치사슬에 대한 총체적 접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내외 기관들과의 협력 네트워킹 강화
- 기초문화의 가치(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 등)와 영향에 대한 인식 공유 활동 강화
- 융합과 협력 기반의 지역문화의 장(field) 형성

재정 전달체계 기능 축소에 따른 지역문화재단과의 새로운 관계는 무엇인가?

- 예술 창작 지원에 대한 중복 가능성 검토
- 건축가 및 후원자 모델에서 촉진자, 네트워크 기획자 모델로 전환
- 국가 차원의 예술적 수월성과 예술생태계 혁신성 확보 노력

II 문화예술 협치의 맥락과 이슈

4. 지역문화재단의 위상 및 운영체계

<맥락>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
- 중앙- 광역문화재단 중심의 예술정책 거버넌스 체계 실태
-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의 협업체계 취약
- 지역문화재단의 취약한 정책역량

II 문화예술 협치의 맥락과 이슈

4. 지역문화재단의 위상 및 운영체계

지역문화재단 현황

- 설립 재단 수 : 광역 16개 / 기초 79개
- 예산 : 광역 2019년 4,640억원 / 기초 2018년 5,540억원 추정
- 전체예산에서 국고 비율 : 광역 39.4% / 기초 4.4%
- 종사자 : 광역 2017년 1,214명 / 기초 2018년 3,973명
- 지역문화재단에 따라 규모, 활동, 조직체계 등에 있어서 차이가 큼

II 문화예술 협치의 맥락과 이슈

4. 지역문화재단의 위상 및 운영체계

<이슈>

-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 독립성 확보 및 정책 역량 강화
- 광역-기초 간 문화예술정책 협의체 필요
- 예술정책 거버넌스 체계에서 기초문화재단의 위상 정립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의 문화예술 협치모델

1. 협치 이념

- ① 자율성 (autonomy) : 문화자치를 위한 자율적 정책체계 구축
- ① 균형성 (equity) : 지역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 간 균형 발전
- ① 혁신성 (innovation) :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혁신과 네트워킹
- ① 효과성 (effectiveness) : 지역 문화예술정책의 합리성과 효과성 증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의 문화예술 협치모델

1. 협치 이념

※ 문화예술 협치 방법의 변화

하향적(Top Down)  상향적, 소통적(Bottom Up / Interactivity)

획일성(Uniformity)  다양성 (diversity) (다양한 이해관계자)

객체(Object)  과정 (process)

행정전달체계 (administrative)  혁신체계 (Innovation System)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의 문화예술 협치모델

2. 4C 모델: Culture, Capacity, Connection, Collaboration

협치 문화 발전 (Culture)

- 문화예술 정책체계 행위자들의 인식, 태도, 행동, 신뢰

협치 역량 강화 (Capacity)

- 정책 분석, 개발, 집행, 평가 역량 강화

협치를 위한 연계체계 활성화 (Connection)

-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 간 소통, 공유, 협력 관계 구축

협치를 위한 협력적 제도 구축(Collaborative System)

- 지원제도, 거버넌스 역할체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의 문화예술 협치모델

3. 문화예술 협치 Issues Map : 10개 이슈

<p>협력적제도 구축 Collaborative Syste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 기반의 지원체계 구축 • 지역경제를 넘는 융합-혁신 프로젝트 개발 • 지역내 문화예술 거버넌스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통과 공유기반의 신뢰 형성 • 예술 옹호 연구 및 공감 활동 활성화 	<p>협치문화 발전 Culture</p>
<p>연계체계 활성화 Connec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 연계 조직의 위상 제고 및 활동 활성화 • 지역내 정책 커뮤니티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재단의 정책역량 강화 •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 지역문화예술지식정보 및 통계 체계 구축 	<p>협치역량 강화 Capacity</p>

1. 협치 문화 발전(Culture)

1) 소통과 공유 기반의 신뢰 형성

※ 지역문화정책 신뢰의 장 (Field of Trust -Distrust)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정책 의지와 체계에 대한 불신
- 지역의 정치성, 문화예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체계에 대한 불신
- 예술 옹호 활동 미흡, 예술의 가치와 영향에 대한 객관적 자료 미흡
- 문화정책 의제화 - 기획 과정 체계의 폐쇄성

“문화분권 시대, 과연 지방자치단체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화예술”이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될 것인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공무원들의 의지, 태도, 행위 등을 고려할 때, 비관적이다”

“문화예술에 영향력 있는 문화예술 분야 및 비문화예술 분야 인사들의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이 낮다”

“예술가, 시민들의 지역문화정책 과정 참여가 제한적이다”

1. 협치 문화 발전(Culture)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행위자들과의 소통, 참여, 공유 활동 활성화

- Roundtable, Forum, Workshop, Conference
- 예술인, 시민들의 문화예술 정책 과정 참여 제도 강화

지역문화예술 부문에 대한 영향력이 높은 리더들의 인식 강화

- 지역문화예술 거버넌스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IV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의 문화예술 협치 과제

1. 협치 문화 발전(Culture)

※ 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 Arts Governance Program

- 예술조직의 리더들 참여
- arts governance 이해, governance skills, 거버넌스 리더십

지역문화재단의 창의적, 소통적 조직문화 창조

- 지역문화재단 종사자의 열정(passion)과 전문성이 발현될 수 있는 조직 문화 구축

1. 협치 문화 발전(Culture)

2) 예술옹호(advocate for the Arts) 연구 및 공감 활동 활성화

- ① 문화예술의 가치 (value)와 영향(impact) 연구체계 구축
- ②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성과 및 영향평가 제도화
- ③ 예술옹호 집단(arts advocacy group) 활동 활성화

“문화예술이 지역사회에 대해 갖는 가치와 의미, 그리고 영향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표, 공유함으로써, 지역으로 하여금 문화예술 지원 및 문화정책 프로젝트 수행 방식 등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음”

“현재 지역 문화정책 과정에서는 문화예술의 가치가 다소 수사학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문화예술의 특성과 가치에 적합한 행정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정책의 결과 및 영향에 대한 연구와 논의 매우 미흡”

1. 협치 문화 발전(Culture)

2) 예술옹호(advocate for the Arts) 연구 및 공감 활동 활성화

“성과 공유회는 산출(output) 단계 수준의 논의에 머무르고 있음”

※ American for the Arts (AFTA)

- Art + Social Impact Explorer
- National Arts Index
- Arts & Economic Prosperity

2. 협치 역량 강화(Capacity)

1) 지역문화재단의 정책 역량 강화

① 정책담당 조직과 인력 강화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광주문화재단 정책연구교류팀, 인천문화재단 정책연구팀, 경기문화재단 정책사업팀 사례)

② 정책데이터 관리, 문화통계, 아카이빙 체계 구축

③ 『지역 연구』 체계 구축

④ 지역문화재단 정책 연구 및 개발의 법적 근거 강화

- **현재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 21조 2항의 지역문화재단의 사업 범위**

“②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 “②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및 조사 연구”

● 지역문화재단(광역-기초)의 경우, 대부분 정책 연구, 개발, 평가 기능이 취약하고, 이를 위한 조직 및 인력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 광역시도 지역연구원의 경우, 1-2명의 문화정책 연구자를 두고 있으나, 연구과제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문화정책 연구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 지역문화진흥법에 『지역문화진흥자문사업단 지정제도』를 두고 있으나, 아직 지역단위에서의 문화정책 전문가 기반이 취약한 실정임

2. 협치 역량 강화(Capacity)

2)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

- 지역문화재단 직원들의 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운영
- 중앙-지역 협력 기반의 지역문화 전문 인력 연수 체계 구축

3) 지역문화예술 지식정보 및 통계 체계 구축

- 문화자치 패러다임에 적합한 지역 문화지표체계 개발
- 지역문화재단의 통계 정보시스템 구축
- 지역문화재단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 지역문화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체계 구축

● 현재 지역문화지표체계는 주로 시설과 인프라 중심의 지표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요 지표, 활동 지표, 영향 지표는 취약한 실정.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통계 및 정책 데이터 체계도 취약.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자료관 기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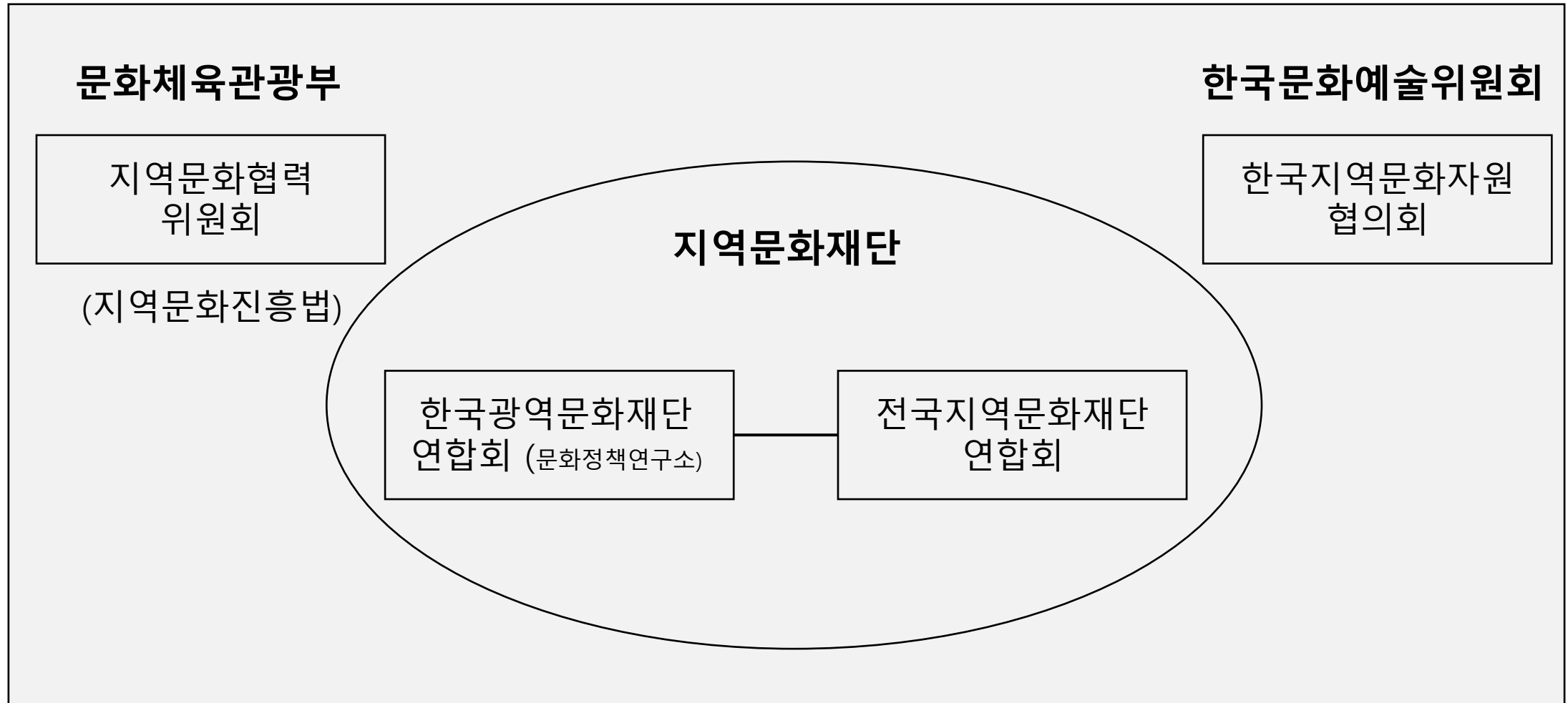
- 지역문화재단과의 협력체계 구축
- 국가 종합 예술 지식정보 아카이빙, 분석, 활용체계 구축

IV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의 문화예술 협치 과제

3. 협치를 위한 연계체계 활성화(Connection)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지역문화재단 협의·조정 체계 현황



3. 협치를 위한 연계체계 활성화(Connection)

1) 중간 연계 조직의 위상 제고 및 활동 체계화

- ① 지역 문화예술생태계의 중계 및 연결점 역할 강화
- ② 지역 현장의 문화정책 이슈 발굴 및 연구 체계 구축
- ③ 소통과 예술 가치 공유, 교류와 협력, 경험과 지식 공유,
- ④ 지역문화정책 인력 (지역문화재단 종사자 등) 역량 강화 기능 수행

●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의 법적 근거 확보 방안 검토

3. 협치를 위한 연계체계 활성화(Connection)

2) 지역내 정책 커뮤니티 활성화 구축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소통과 공유 기반의 정책과정 설계
- 예술계 및 시민사회 참여 기반의 정책 라운드테이블 활성화
- 새로운 정책 커뮤니티 참여자 발굴을 통한 행위자 구조의 다양성 확보

미국: National Assembly of State Arts Agencies (NASAA)

- Research
- Advocate for the Arts
- Connect
- Event & Seminars

미국: Arts Education Partnership

- NEA, Department of Education, 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
- Forum
- Research

4. 협치를 위한 협력적 제도 구축(Collaborative Institutions)

1) “협약” 기반의 지원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 도입 검토
- 협약 방식의 지원체계에 적합한 지역 자율형 기획 보조금 사업 모델 개발 연구

■ 프랑스의 계획협약제도

■ 영국 디지털미디어스포츠부와 ACE의 Funding Agreement

■ 미국 NEA의 Partnership Agreements 지원 제도

- State Partnership Grant Program
- Regional Partnership Grant Program

4. 협치를 위한 협력적 제도 구축(Collaborative Institutions)

2) 지역 『경계를 넘는』 융합 혁신 프로젝트 개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 창작 프로젝트 개발

- 국가 차원의 대규모 · 혁신 프로젝트 개발 (다년도 사업 방식으로)
- 지역 “예술창작 분야” 지원을 위한 지역 파트너십 전략 지원 개발 및 예산 지속 확보 필요

- ※ NEA : 예산의 40%를 파트너십 협약 방식으로 지역 지원
- ※ 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 MPA(Major Performing Arts)
- ※ ACE : National Portfolio Organization

지역문화재단 사업성과 기반의 연계 프로젝트 개발

- 사후 평가 기반의 시상 제도 도입 및 인센티브 지원 방안 검토
- 지역문화재단 수혜 예술집단의 전국적 활동 및 해외 진출 활성화 지원 검토

4. 협치를 위한 협력적 제도 구축(Collaborative Institutions)

“ 현재 광역문화재단 **예술 창작 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의 **20.7%이고**, 국고 보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의 비중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지방 이양이 자칫 향유 중심의 문화정책**을 더 가속시키고, 예술생태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16개 광역문화재단별로 전체예산에서 **예술창작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14.8%에서 28.9%로 격차**가 존재함.

* 광역문화재단의 사업별 예산 비율(2018)

사업	예산 비율(%)
지역/생활/향유	33.4
공간운영/기타	29.8
예술창작	20.7
예술교육	13.2
소통과 정책	2.9

4. 협치를 위한 협력적 제도 구축(Collaborative Institutions)

3) 지역내 문화예술 거버넌스 체계 구축

지역문화재단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 책임성, 전문성 확보
-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이사 활동의 내실화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재단 개입 유형 실태

- 관리, 감독권한, 공무원 파견, 예산편성기준, 계약 및 회계 기준, 업무처리 절차
- 지방자치단체장, 대표이사의 영향력

4. 협치를 위한 협력적 제도 구축(Collaborative Institutions)

3) 지역내 문화예술 거버넌스 체계 구축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광역단위별로 광역·기초 문화분권 협의체 구성 운영
- 광역문화재단·기초문화재단 협력형 사업 개발

공공 - 민간의 문화예술 파트너십 구축

- 민간부문의 예술조직을 지역문화재단 정책 파트너로 적극 활용
- 비영리 및 민간부문의 예술조직 중에서 지역사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전문 역량을 갖춘 예술 조직을 지역사회 문화 거점 기관으로 적극 발굴, 육성
- 예술의 사회적 가치가 강조되면서,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구축 수요 또한 확대될 전망

향후 자치분권 시대, 예술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새로운 예술정책 협치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및 논의 지속.

향후 연구 과제들

- 예술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협치 모델 및 중장기 의제 개발 연구
- “협약” 방식의 지원체계 모델 개발 연구
- 지역문화격차 지표체계 개발 및 측정 방안 연구
- 지역문화재단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 연구 및 지식정보 공유 체계 구축 방안 연구
-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 연계 기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중간 연계조직의 위상 및 역할 모델 개발 연구
-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의 협치 모델 개발 연구
- 지역문화재단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 등

서울 예술지원 현안 공유 및 문화행정 협력방안 제안

<문화예술 협치를 위한 현장 콜로키움(2019.9.6.) 발제문>

임미혜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본부장)

0. 서울 예술지원 현안

#1. : 예술지원 다변화(현장) vs. 문화행정의 경직성

올해 초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정기공모사업 결과발표 지연이라는 사건은 우리나라에 순수 예술과 관련된 생태계가 존재하는가, 동시대 예술가들의 예술 행위는 어떠한 의미와 영향력을 갖는 사회적 활동인가 라는 본질적 질문을 문화행정 영역에 던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재단은 내부 혼란과 외부 비난을 수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예술지원 현장의 빠른 진화와 다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예술지원기관의 행정 업무방식의 경직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술창작이라는 특수한 문화행정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법령과 지침에 가로막혀 (지원업무 효율화를 위한) 정산 간소화도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예술지원의 자율성은 고사하고 운영에 묘를 더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시간적으로도 예술지원사업은 대체로 전년도말 공고와 연초 심사를 통해 3-4월부터 그 해 12월까지 통상 일 년이라는 짧은 주기로 운영되기 때문에 파급력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성과를 거두거나 다음해를 준비하는 새로운 지원사업, 제도를 설계하거나 추진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 예술은 새로움을 만들어 내야 하는 영역이고, 예술 현장은 예술창작이나 예술교육, 지역문화, 생활예술 등 정책과 행정에서 정하는 것처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개별 지원사업이 정하는 것처럼 특정한 지향, 기대효과를 맞추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다양한 예술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도, 예술 생태계 활성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예술에 대한 공공 지원의 핵심 문제는 방법보다 구조에 있다.

#2. 예술창작의 새로운 철학·주체·형식·방법 등의 수용 이슈

최근 몇 년간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인 것 같다. 예술은 이미 미래사회인 오늘에 대해 어떤 생존전략을 찾고 있으며 또 예술지원기관은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1980-90년대에 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각종 문화기반시설을 건립했고 2000년대 이후로는 시설 운영주체로서 문화재단과 각종 예술지원기관을 설립하는데 주력해왔다. 그래서일까? 예술을 지원하는 태도이자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술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공적(사회적) 합의, 그리고 예술에 대한 지원 목적이 미흡한 상황이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정치·사회·경제·문화의 중심, 집적된 인적자원과 개발자본 등이 넘쳐나는 곳인 만큼 서울의 예술 현장도 다이나믹하다. 이런 환경에서 예술창작을 위한 공공지원은 새로운 예술 주체의 발굴이나 육성, 새로운 예술 형식과 방법의 실험, 나아가 예술의 개념과 철학까지도 출현(emergency)할 수 있도록 그러한 활동의 여건을 조성하고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예술창작이 노동(labor)이면서 동시에 작업(work), 행위(action)가 되는 세계를 상상하고 실제로 어떻게 지원해야 효과적일까를 프로세스와 체계로 설계할 수 있어야 예술가들이 살 만하고, 그래야 사회 전반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

#3. 서울예술인플랜 2.0 수립 요구 및 예술지원정책 거버넌스 혁신 이슈

서울 예술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2016년 발표된 서울예술인플랜을 보완 대체할 수 있는 ‘서울예술인플랜 2.0’의 수립이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구상하는 2.0의 핵심은 종전 플랜처럼 광범위하지 않고 예술인 고유의, 가장 근간이 되는 활동인 예술창작 영역에 놓여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은 지금까지 예술지원기관이 독자적으로 처리해온 문화행정의 권한을 예술계와 함께 나누는 것, 즉 예술인의 직접 참여를 통한 예술지원정책의 설계와 운영이 가능한 거버넌스의 구성이다. 서울시가 5년 전부터 시작한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예술가의 당사자성이 공적 영역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공감되고 지지될 수만 있다면) 예술지원정책 네트워크 구성에 참고할 만한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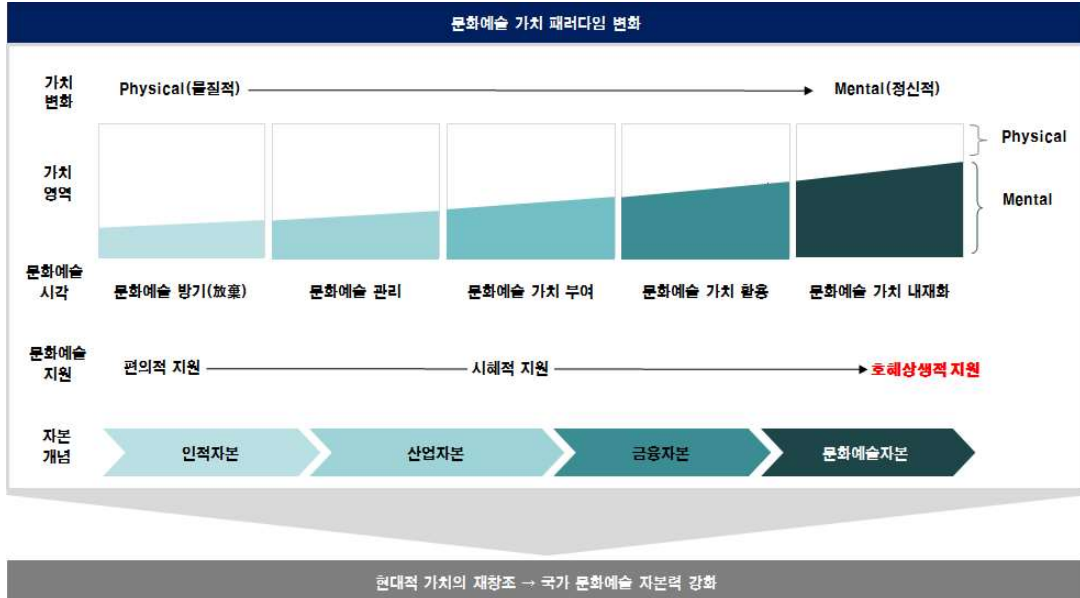
1. 문화행정 협력 가능성 검토

1) 제안을 위한 검토 #1. : 우리나라 문화행정 변화과정

구분	형성기	발전기	도약기	성숙기	전환기
period	1948-1967	1968-1979	1984-1989	1990-2005	2006-현재
event	-1948년 정부수립, 문화행정업무 개시 (문교부, 공보처) - 국립중앙박물관 (1949), 국립극장 (1950), 국립국악원 (1950) 설립 - 문화재보호법 (1962), 영화법 (1966), 음반에 관한 법률(1967) 제정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법률 제2337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개원 -제1차 문화중흥5개년계획 (1974-1983)	-1985년 박물관법 제정 -1988년 올림픽 개최 -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당, 기타 문화시설 (문예회관 등) 건립 - 문화발전 10개년 계획 수립	-1996년 (사)전국 문예회관연합회 설립(*2012년 법정법인화) -2004년 ‘창의한국·21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전’ 수립 -2004년 문예진흥법 개정(200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범)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2006년 (문예위) 국제예술지원기구연합체(IFACCA) 가입 -2011년 예술인복지법 제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개소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오픈 -2014년 문학인 세월호 사극선언(*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시작) -2016년 생활문화진흥원 설립 (→2017년 지역문화진흥원),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출범 -2017년 문화기본법 제정 -2018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발표, 제도개선 권고 -2019년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용자) 시범사업 시작
main agent	(문교부, 공보처, 공보부) 문화공보부	문화공보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공보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예회관연합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예회관연합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역문화진흥원

※ 『우리나라의 문화행정』(문화부, 1992), 『지역분권 관점에서의 주요국가 예술지원정책 분석연구 : 영국, 프랑스, 미국을 중심으로』(양혜원, 2018) 등을 참고하여 재구성

2) 제안을 위한 검토 #2. : 미래 문화예술지원 패러다임 · 지원방향 Positioning



[그림 1 : 문화예술 지원 패러다임]



[그림 2 : 문화예술 지원방향 Positioning]

※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정책연구06/2019.2.), p.34-35.

3) 시사점

미래 예술지원 패러다임을 예술의 가치 내재화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문화자본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상정할 때 예술지원기관들 사이, 기관과 예술계 사이에 “호혜상생적 지원협력”은 필수(기초)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호혜상생적 지원협력”의 포인트는 각 주체의 기능과 역할 중복을 피하되 각각은 서로를 반드시 이롭게 하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연계 혹은 통합하는 것이다. 간단한 예를 들면 앞으로는 모든 시·도가 동일한 지침에 의해 동일한 사업을 각자의 지역에서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하단 3. 사례 검토 참조) 혹은, 현재의 기관별 분절적으로 진행되는 예술지원사업을 통합적으로 재구조화(유사한 지원 체계와 사업을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ex. 한문연 방방곡곡 사업과 문예위-지자체 매칭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이 상호 연결 보완되도록 통합 재설계) 다르게 표현하자면, 긴밀하게 협력하고 시너지를 내기 위해 각자의 영역을 독립적, 자율적으로 세팅하고 나름의 자치체계를 갖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제도주의 이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공공조직에 기대되는(약속된) 자율성 발휘가 부족할 때 목표와 실제의 디커플링(de-coupling)의 발생을 피하기 위해 각 조직의 자율과 자치에 기초한 협력과 협치 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다. 이러한 전략은 어쩌면 가장 강력한 예술지원기관 간 파트너십을 만들어낼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예술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예술지원생태계 이해당사자(주체) 간 관계성을 만들고 유지시키는 네트워크 구조를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네트워크 구조는 흩어져있는 점조직과 같은 예술계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대표자주의나 당사자주의 각각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고 소속이 다른 지원기관들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구조와 협력의 방식이 작동하도록 하는 수행의 물줄기는 결국 ‘돈’에서 흐른다. 새로운 문화행정의 구조와 역할이 설계된 뒤에는 균특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각종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 새로운 자율과 자치 기반 협력 네트워크 작동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재원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사례 검토 : 2020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 서울형 운영방안

1) 서울지역 주요 운영 현황(변화 중심으로)

- 2009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광역재단으로 사업 이관 (지역협력형 사업)
 - ‘예술 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사업’ + ‘공연단체 육성지원사업’
 - 지원자격 : 서울 소재의 모든 공연장(공공, 민간), 3년 이상 창작 및 공연활동 경력 단체
 - 공연장 pool 선정 후 재단에서 공연예술단체 심사하여 공연장-단체 매칭 선정(~2010)
- 2011년 : 공연장-예술단체 사전 매칭(협약체결) 방식 변경, 공연장 주체로 신청(최대3억)
- 2012~2015년 : 사업 지향 및 내용/방식에 따라 <2 Track> 구분 지원
 - ① 공연예술 창작 활성화(“향유” 중심) ② 지역문화 커뮤니티 활성화(“참여” 중심)
- 2016년 : 민간공연장 제외, 등록된 공공 공연장만 대상, 1년 단위 단년 지원 전환
- 2018년 : 예술단체 주체로 신청 전환 (1공연장 최대 3단체 매칭, 단체당 8천만 원 내외)
- 2019년 : 경쟁률 심화, 예산 감소로 인해 공연단체당 최소 지원금액 축소(8천⇒6천만 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이슈	사업 이관			2 Track 지원 (신청시 택일) (창작활성화 or 지역문화 활성화)			지침 강화 및 창작 활성화 지원 집중				
	2년간 지원				1년	2년간 지원		1년 (현재 단년 지원사업)			
매칭	재단, 심사위원단		공연장, 예술단체가 자율적으로 매칭, 사전 협약 체결 후 신청								
신청 주체	공연장, 예술단체		공연장			공연단체		공연장		예술단체	
사업비 (백만 원)	1,767	2,957	2,300	2,724	3,064	3,268	2,966	2,888	2,142	2,396	2,006

※ 최근 25개 자치구 중 일부 선정 집중 및 일부 지속 누락 현상 발생으로 민원 발생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출

문제진단	개선방향
<p>o 지난 10년간 중앙지침에 의한 배분형 사업으로 운영, 지역 현장성(수요, 특성) 반영 미흡 - 서울에 집중된 공연장, 예술단체 수요 대비 부족한 배분액 + 2014년 이후 예산 지속 축소</p> <p>o 1년 단위 공연장-예술단체 매칭구조로 인해 신규 지원자(공연장, 단체) 참여에 애로 발생 - 단년 지원(실제 5~12월 사업기간에 불과)으로 단기적 성과 가능한 기존 매칭관계에 머물러는 관성, 신규 보다 경력단체를 선호하는 편향 등 지원목적에 미부합하는 현상 발생</p> <p>o 서울시민의 문화수요 증가로 인해 25개 자치구별 공연 창작 및 향유 활성화 요구 확대(서울이라는 지역 내 기초라는 또 다른 지역 이슈 발생) - 자치구별 공연장 운영 여건이 상이하여 객관적 여건(시설, 조직, 예산 등) 중심으로 선정시 특정 자치구(좋은 공연장 보유한)에 유리한 불평등한 구조</p>	<p>☞ 2009년 이관 후 2019년 현재까지 국비와 시비 1:1 매칭사업으로 진행된 바, 전국 균형발전 고려한 중앙지침을 개선, 서울의 특수성 고려한 예산 증액 및 서울시 추가예산 편성 추진</p> <p>☞ 1공연장 3단체까지 매칭 가능한 구조이므로 단체 경력단계별 지원방향(진입-성장-기여) 고려한 공정한 경쟁구조로 개선 검토(혼합경쟁 ⇒ 신규, 중진 등 경력수준별 경쟁), 충분한 사업기간(2년 단위) 확보로 “성과 지양, 성장 중심”의 내실있는 공연장 상주효과 제고</p> <p>☞ 자치구별 환경 조성을 통한 서울시 전체 공연 예술 활성화 목표를 설정, 25개 자치구 모두 고른 사업 참여기회를 바탕으로 공정 경쟁할 수 있도록 개선 : ① 지역별 공연예술 활성화 기반인 공연장 지원 방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매칭방식 개선(사전⇒사후) ② 자치구 전반의 공연환경 전반의 개선 및 활성화 유도를 위해서는 공공 공연장 뿐 아니라 구 내 민간 공연장도 필요시 참여대상으로 포함 (※ 현재 사업지침(문예위)상 민간 공연장 참여불가) ※ 공연장은 그 자체로 공공성(the public)을 지닌 공간이므로 민간 운영주체 공연장도 공공지원에 참여 및 기능 분담, 역할 확대에 기여하도록 개선 검토</p>

3) 추진방안 : 단위별 파트너 주체 간 협력(협약) 및 사업 리모델링

- 예시) ▶ 문체부-서울시 : 사업 예산 증액(국회, 시의회 작업) 및 지침 해제
- ▶ 문예위-서울문화재단 : 관련사업 통합적 리모델링(하단 #2 참조), 운영협약, 평가 등

문화분권시대의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

- 조직 재정비와 재정 확보방안-

서 정 문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 들어가면서

‘문화예술진흥법’에 더하여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초예술 창작활동 지원 중심에서 생활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전국민을 문화시민화하고자 하는 노력(문화예술 플랫폼, 생활문화 플랫폼 등)이 여기저기서 목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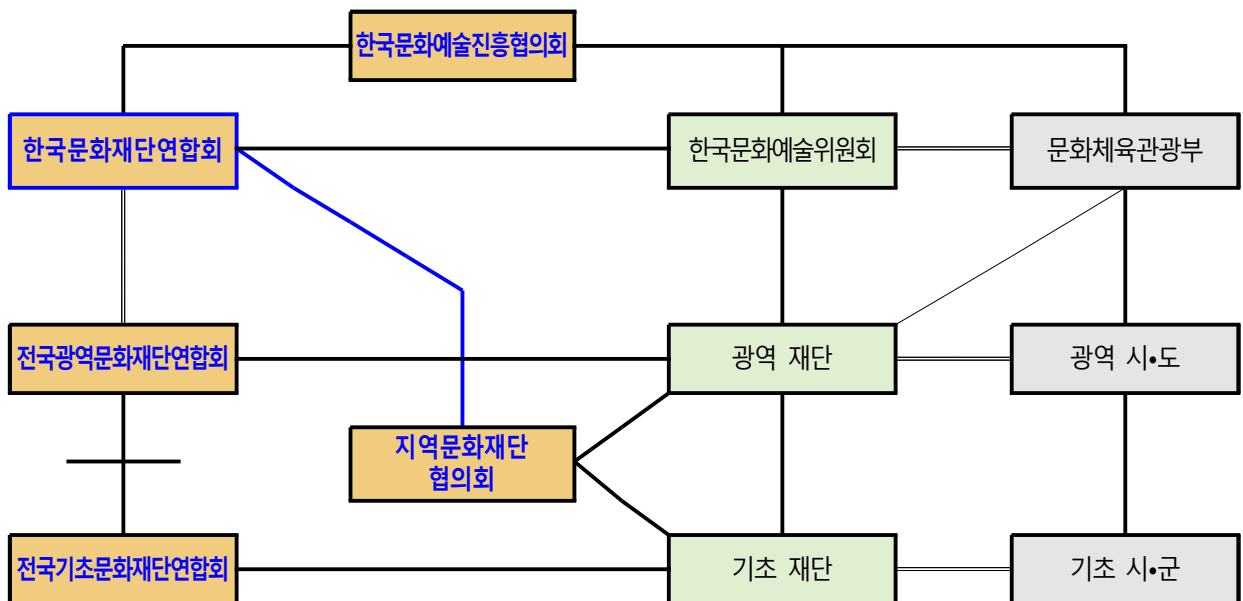
문화예술 진흥, 예술교육, 문화나눔 등에 관련된 중앙정부 재정도 지방분권화가 가속될 경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문화예술진흥 공모지원사업의 근간을 이루던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고갈로 인해 ‘지역발전 특별회계’라는 명목으로 그 책임이 전가(轉嫁)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등이 탄생되었으나, 그동안 이렇다 할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술현장 의견수렴 라운드테이블도 그러한 의미에서 마련되었으리라. 이에 우리가 직면한 앞으로의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조직의 재정비와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 조직의 재정비

우선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역·기초 재단 간의 원활한 소통,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체계적인 조직체계를 갖추어 역할분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명칭은 예제임]

조직이 힘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일단 서로 고민거리를 많이 공유할 수 있는 기초는 기초끼리, 광역은 광역끼리 뭉쳐서 각각 ‘전국기초문화재단연합회’, ‘전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를 건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둘을 합쳐 ‘한국문화재단연합회’를 만들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결합된 조직 ‘한국문화예술진흥협의회’가 거버넌스 조직이 되어야 정책수립 및 집행의 수월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또한 광역단위의 상시적인 긴밀한 협력을 위해 ‘지역문화재단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경기도문화재단협의회’가 그것이다. 그 유용성에 대해서는 뒤에 제시할 재정 다각화를 위한 협력 사업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초예술분야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역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 예술후원 네트워크의 구축, 예술교육과 문화복지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기초·광역 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책임지고 분담하여 감당해야 할 영역과 협력해서 해야 할 사업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할 것 같다.

※ 사족(蛇足) : 중앙 조직 이대로 좋은가?



◆ 재정 다각화를 위한 협력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발전해가는 자동화, 인공지능, IoT, 바이오산업 등으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는 무한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의 창의력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창의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영역이면서도 하이테크놀로지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인류의 자산이다. 창의력 향상의 일등공신으로 여겨지는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희망찬 미래사회의 희비는 문화예술을 어떻게 보듬고 가꾸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침체를 이유로 문화예술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으로는 문화예술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문화예술과 관련한 예산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있다. 우리의 예산확보문제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된다. 지방분권화가 가속되면 문화예술재정의 중앙정부의존도를 벗어나서 다각화시켜야 한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그동안 기초예술 창작활동에 직접 지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정책을 펴왔다면 앞으로는 창작 기반 또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예술가의 기초생활보장, 창작공간제공, 발표기회확대, 아트마켓 활성화 등 종합적인 지원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미루고 여기서는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경험해온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실천적 경험을 예로 드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다. 즉,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그리고 기초단체, 기초문화재단과 어떻게 협력해 왔는지, 경기 문화재단 내·외 기관과의 협력 그리고 후원기업과 협력해온 사업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재정확대를 위한 협력사업

① 경기도+기초단체(안산·화성·시흥)+경기문화재단

- ● 경기만에코뮤지엄

	경기도	안산시	화성시	시흥시	계(합)	비고
2017	1,150,000	105,000	650,000	230,000	2,135,000	
2018	1,780,000	105,000	300,000	300,000	2,485,000	
2019	1,930,000	110,000	200,000	100,000	2,340,000	경기에코뮤지엄 조성

② 경기도 대행사업

- ① 경기상상캠퍼스 조성·운영사업

	국비	경기도	계(합)	비고
2017	1,400,000	4,200,000	5,600,000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포함
2018	1,900,000	5,300,000	7,200,000	
2019	3,400,000	7,530,000	10,930,000	

- ② 계기성 공기관대행사업 : 경기도청년신진작가공모전, Irony&Idealism 국제전, 경기천년대축제 (경기천년도큐페스터, 경기그레이트박스 발간 등) 등

③ 기초(시군)단체 협력사업

- ① 기초단체 협력 문화예술 기획지원

	시군	사업명	단체	지원금	매칭비	계(합)
2018	시흥시	아시아전통연희축제	한국예술종합학교산학협력단	60,000	230,000	290,000
	수원시	경기인형극제 in Suweon	경기인형극진흥회	100,000	80,000	180,000
2019	안성시	한+브 수교 60주년 기념행사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20,000	30,000	50,000
	수원시	경기인형극제 in Suweon	경기인형극진흥회	80,000	80,000	160,000

- ② 수원시 벌터문화마을만들기

	국비/도비	시비	계(합)	수수료	비고(수수료는 시비 5%)
2017	80,000	180,000	200,000	9,000	국비
2018	80,000	180,000	200,000	9,000	국비
2019	100,000	100,000	200,000	5,000	도비

- ③ 기초단체 대행 및 협력사업

	시군명	사업명	사업비	수수료	비고
2017	동두천시	동두천 K-rock 홍보관 조성	274,863		
		동두천 K-rock 음악축제	299,263		
		거리예술 조성	127,078		
		보산역 그래피티 조성	98,795		
		작은미술관 운영	50,000		전시 6회, 교육체험 3종
	시흥시	오이도 포토존	50,000		
	연천군	연강갤러리 전시 운영	75,000		
	파주시	임진각 생태탐방로 전시	60,000		
2018	동두천시	송탄출장소 공공미술 프로젝트	165,000		
		전곡항 공공미술	500,000		
		문화관광 콘텐츠 공공미술	180,000		
		캠프보산 거리예술 공공미술	166,500		
		도심재생야간축제	123,500		
	연천군	생연2동 안전골목길 조성	250,000		
	화성시	한국메세나협회 동두천지원사업	10,000		
	연천군	연천 재인스토리 창작품 공연	40,000		
화성시	전곡항 LED 예술조명 조성	250,000			

2019	동두천시	보산동 경관조명 특화거리 조성	754,000		
		캠프보산 공공미술 공공미술	250,000		
		보산동 음식문화거리 조성	400,000		
	시흥시	월곶지구 공공미술	50,000		
	파주시	경기문화콘텐츠 사업	11,000		
	화성시	신림자원체험관 전시교육 콘텐츠 조성	700,000		
전곡항 환경개선사업		1,000,000			

4 기초문화재단 협력사업

- ① 지역예술활동지원

	협력재단	2017		2018		2019		비고
		지원금	매칭비	지원금	매칭비	지원금	매칭비	
1	고양문화재단	-	-	-	-	53,000	70,000	
2	광명문화재단	-	-	27,000	40,500	42,000	76,500	
3	군포문화재단	44,000	64,500	44,000	66,000	40,000	70,000	
4	김포문화재단	28,000	50,000	41,000	61,500	45,000	67,500	
5	부천문화재단	73,000	108,000	68,000	110,000	71,000	110,000	
6	성남문화재단	71,000	122,100	66,000	104,250	61,000	140,000	
7	수원문화재단	81,000	123,000	77,000	123,000	70,000	114,805	
8	안산문화재단	56,000	54,000	48,000	58,000	50,000	60,000	
9	안양문화예술재단	51,000	95,000	57,000	100,000	55,000	110,000	
10	여주세종문화재단	-	-	25,000	84,000	47,000	85,000	
11	오산문화재단	37,000	30,000	36,000	40,000	32,000	54,000	
12	용인문화재단	68,000	102,000	65,000	105,000	56,000	84,000	
13	의정부예술의전당	58,000	87,000	69,000	88,500	54,000	81,000	
14	하남문화예술회관	45,000	71,400	48,000	76,400	40,000	64,400	
15	화성시문화재단	54,000	81,000	54,000	81,000	50,000	249,000	
	계(計)	666,000	988,000	725,000	1,138,150	716,000	1,436,205	

- ② 기초문화재단 협력지원 [G아트 프로젝트]

	협력재단	사업명	지원금	매칭비	계(計)	비고
2017	부천문화재단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기획사업	20,000	40,000	60,000	
	성남문화재단	이매동 문화가 있는 거리조성사업	30,000	60,000	90,000	
	의정부예술의전당	문화로달린다(경전철 칸타빌레)	25,000	50,000	75,000	
2018	군포문화재단	공공예술 프로젝트 구름다리 미술관	15,000	30,000	45,000	
	부천문화재단	부천인문로드의발견 등	20,000	40,000	60,000	
	안산문화재단	청년예술활동 마중물 프로젝트	15,000	30,000	45,000	
2019	여주문화재단	감고당 사랑채 '옛일을 생각한다, 일을 느끼다'	12,500	25,000	37,500	
	의정부예술의전당	천상병 예술제	33,000	60,000	93,000	
	성남문화재단	성남 퍼포밍 페스티벌 in 판교	30,000	69,000	99,000	
	안산문화재단	청년예술활동프로그램 마중물 프로젝트	24,000	36,000	60,000	
	광명문화재단	광명시민회관 가족극장	25,000	103,500	128,500	
	김포문화재단	북변363 예술광장 프로젝트	28,000	42,000	70,000	

- ③ 옆집예술

	협력재단	지원금	매칭비	계(計)	비고
2017	화성문화재단	30,000	50,000	80,000	
2018	안산문화재단	50,000	30,000	80,000	
2019	김포문화재단	50,000	50,000	100,000	

5 기관/단체

- ① 경기도미술관(퀀텀점프/생생화화), 경기도문화의전당(공연예술페스타) 등
- ② 영은미술관(아트프로젝트) 등

문화예술 협치는 어떻게 가능할까?

김기봉(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1. 문화자치와 문화분권

- 왜 문화자치를 하는가?
- 지역문화행정과 정책의 목표는 전통과 역사자원 보존 및 창조적 계승, 지역 주민들의 문화가 있는 삶 확보,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환경 조성, 문화와 예술을 통한 지역발전 등
- 문화행정·예술행정은 일반 행정이면서 동시에 특수행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재단 존재 이유
- 문화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주민과 문화예술인의 참여를 통한 협치 제도화. 이를 매개하는 지원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정립될 때 가능함
- 문화분권은 문화자치를 위한 제도 개선과 재정 확보를 의미

2. 현재의 문화예술 협치 문제점

- 일반 행정은 제도와 재정으로 위계화.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로 수직 전달체계
- 문화예술행정은 지원 공공기관 난립, 광역재단 설립 완료, 기초재단 설립 확대 중. 문화예술 분야를 세분화하여 지원 기관 설립. 창작과 향유, 예술인복지, 예술시장, 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 전통문화 등.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은 행정기관과는 달리 위계적 또는 수평적 질서 및 전달체계 미비로 혼란. 전체적으로 아직 공사 중
- 무엇을, 누구를 위한 공사인가?
- 지역재단은 지역적 상황과 조건에 따라 규모와 사업 등 다양함. 기초 없는 광역재단, 기초 많은 광역재단 등

3. 전달체계 구축 미비로 현장은 혼란

- 장르와 기능 중심으로 관련 법 제정과 기관 설립 이루어짐
- 문화부의 문화예술정책의 칸막이는 갈수록 심화
- 예술국은 장르 중심, 지역국은 생활문화, 문화도시, 전문인력, 문화시설/공간 등 사업 중심. 예술국에는 지역이 없고, 지역국에는 예술이 없음
- 유사 사업, 중복 사업 등으로 인해 재정 낭비 심각
- 예술현장은 위기. 예술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음. 재생산 구조가 붕괴. 대학에서 예술관련 학과 축소 및 폐지, 예술관련 학과보다는 대중·실용예술 등으로 집중. 기초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콘텐츠 중심으로 산업과 시장 형태의 먹이사슬이 구축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지원기관 설립 난립으로 공공예술시장 형성되고 있음. 창작생태계는 무너지는데 기획·행정인력만 늘어나고 있어 생태계가 악순환되고 있음. 총체적 난국

4.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현장을 중심에 두고 전달체계 재구축(정책 및 사업전달체계)
- 현재 정책은 행정 관료들 통해서 내려오고, 사업은 공모 방식을 통해 선정되고 있음
- 정책과 사업 분리는 필연적으로 협치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음. 민관협력 즉 거버넌스는 민이 주도하는 행정지원 방식이 아니면 현실 불가능한 이념형. 중앙의 공공기관과 지역의 문화재단은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으로서의 종속적 위상과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못함
- 더 이상 늦기 전에 지원기관들이 모여 공론화 시작해야 함
- 행정 기관의 위계적·수직적 방식이 아닌 다양성과 자율성에 바탕을 둔 새로운 협치모델이 필요함

토 론 문

노영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문화자치 분권과 문화적 균형발전의 추구

- 자치.분권과 더불어 문화적 균형발전 또한 중요한 현안 중 하나임. 2019년에 발표된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도시-농촌, 시-군-구,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지역 간 문화격차가 여전히 나타나는 점 또한 엄연한 현실임. 따라서 문화의 지역 간 균형발전 또한 놓칠 수 없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시대적 요구임.
- ‘자치’와 ‘분권’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과 인력, 자원, 사업집행권한, 감사.평가 등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그리고 균형 있게 이양함을 의미함.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권한과 더불어 ‘책임’까지 이양되며, 정책결정을 둘러싼 정치·행정적 관계가 중앙-지역에서 지역 내로 무게 추 이동 예상
 - 권한이 커질수록 그만큼 사업추진의 질적.양적 성과 제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권한의 합리적 행사와 남용방지, 지역 내 이해관계자 간 건전한 협력과 견제 등 지역이 짊어질 ‘역할’과 ‘책임’은 커지게 됨.
 - 특히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예산편성, 정책기획 및 집행을 둘러싼 지방정부(지자체·지방의회)와 시민사회간의 관계설정 및 갈등조정이 중요한 현안이 될 것임.
- 이상적이고 효과적인 ‘권한’과 ‘책임’의 행사는 곧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관련됨. 인적.물적 자원, 재정여건과 정책추진 역량이 축적되어 있는 지역은 그렇지 못한 곳에 비해 정책의 성과 제고, 위기관리 등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게 될 것임.
 - 지역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자치’와 ‘분권’은 역설적으로 지역 간 경쟁과 갈등을 유발하고 지역 간 불평등을 확대시킬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제로섬(zero sum)이 아닌 모두가 승자가 되는 포지티브섬(positive sum)의 관계이어야 함.
 - 이를 위해 지자체, 민간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문화적 격차 해소와 균형적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지원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함.
 -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간의 긴밀한 협력과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민주적이고 건강한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지역문화정책 추진 방식의 개선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역문화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문화정책 의지보다는 중앙

정부 문화정책의 일부분으로 간주된 측면이 강했음. 또한 일률적·일방적인 자원 공급, 단발의 이벤트성 사업 중심의 정책 추진이 문제되어 왔음.

- 따라서 문화자치·분권, 문화적 균형발전을 지역문화 정책의 가치이자 목표로 분명히 하고 이를 법·제도에 명확히 반영하는 한편, 단발성 사업기획보다는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의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할 것임.
- [① 체계적·종합적 접근] 개별사업, 단발성 사업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정책 비전 및 추진 방식을 바꾸는 접근 필요
 - 문화 관련 중앙정부 법률의 정비와 지방조례 제정,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제도 개선
 - 지역 문화재정 운용방식 개편 [보조사업 개편 및 집행방식 개선(예. 내역사업 통합조정과 중앙-지역 협약제도 도입), 문화예술 관련 예산 확보 및 실효적 집행 대안 마련(예. 주민참여예산제 등), 공공예산 의존도 해소(예. 기업메세나 활성화) 등]
- [② 정책의 효율적 추진] 추진체계의 개편, 지역문화진흥 관련 거버넌스의 구축 등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얽혀있는 문화 관련 정책전달체계를 개선
 - 정책 의사결정구조의 합리적 개선, 협력적 분권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법제도 개선을 통한 거버넌스의 안정적 구축)
 - 지역 내 문화예술진흥기관의 설치, 기능조정과 민주적·독립적·효과적 운영 (독임제 '지역문화재단'의 '위원회' 체계로 전환?)
- [③ 문화자치·분권 역량 강화] 지역의 문화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 여건의 개선이 요구됨. 지역의 내생적 문화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 등 인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
 - 지역문화 관련 조사·통계의 안정적 구축,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한 정보유통 강화 (예. 지역문화통합정보플랫폼 구축)
 - 문화예술의 경제·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 (지역사회 내 문화예술 요구도 상승 및 지방정부와의 협상력 제고)
 - 지역문화 인력관리 방안 및 일자리/창업 창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확대, 일자리 매칭, 문화인력의 재교육과 네트워킹을 통한 역량강화 등)
 - 지역문화자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지역학 육성과 관련 문화정책 추진